

투데이칼럼

한미 조선업 협력

최근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은 미한동맹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침체된 조선업을 되살릴 수 있고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2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미국, 특히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우리 동맹들, 특히 한국과 일본에 있는 조선업 관련 전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현재 미국의 조선업은 새로운 건조와 유지·보수 모두에서 엄청난 지연을 겪고 있다. 미국이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함선은 355척이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조선소에서 군함이나 관련 부품을 건조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리고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해안경비대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주요 선박 부품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한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거론한 바 있다.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는 획기적인 일이다.

조선업 부문을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위산업 협력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조선업은 그동안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사실상 금기시됐던 분야다.

한국은 침체된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동맹이다. 해양 협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동맹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위협을 줄이고 해군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한국과의 협

력 확대가 필요하다. 투자와 법률, 공동 개발과 유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양국의 조선업 협력 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매우 역량 있는 조선소가 있고,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과 주일미군 작전참모, 합동참모본부 작전분석가를 역임한 마틴 소장은 "한국은 뛰어난 성능의 군함 건조 역량을 입증했다"면서 "다른 동맹들도 비슷한 역량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역량은 어떤 면에선 독보적으로 강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의 역대 우선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최첨단 선박 설계, 건조 및 수리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다.

특히 한국은 상업용 조선업이 매우 발달해 있다.

이것은 군사 부문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다른 모든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력과 전반적인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과 뛰어난 기술 인력을 한국 조선업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은 대형 구축함이나 그와 비슷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양국의 군함 건조 협력이 핵심수출 기술 공유로까지 진전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미 간 양국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가장 큰 분야는 아마도 수상함, 전투함, 보조함 등일 것이다.

물론 잠수함 기술이나 핵 기술이 어느 시점에 공유될 가능성은 있지만, 초기 진입 지점은 더 전통적인 전투함 분야에서 시작될 것이다.

중요한 건 한국이 태평양 전역 방위 계획에 참여해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방위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점이다. 핵 잠수함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젤렌스키 “유럽의 재무장 노력 환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27개국 특별 정상회의에 도착해 인도니우 코스타(왼쪽)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 재무장 노력을 환영한다”라며 “이 계획에 따른 국방 자금으로 유럽 모든 지역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프타르 함께하는 UAE 무슬림들



지난 8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리마단 단식을 마친 무슬림들이 이프타르를 함께하고 있다.

사설

고령 운전기사 자격

지난해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등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졌다. 정부가 65세 이상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합격을 99%에 달했던 자격검사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앞 차랑을 그대로 들어받아버린 마을버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택시, 그리고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까지 운전자는 모두 만 65세 이상이였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65세 이상 운전기사들에 대한 적격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합격률 98.5%에 달하는 '자격 유지검사'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빠르게 사라진 자동차의 위치를 기억하는 시험은 바로 시야각 검사다.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을 받으면 부적합판정이 나온다. 2개 항목 이상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기준이 높아진 것이다.

검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본인을 위해서라도 강화 되는 게 좋은 일이다. 병원에서 혈압, 시야각 등만 재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제한된다.

사고를 많이 냈거나 만 75세 이상 운전기사라면 반드시 강화된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초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6개월 단위로 추적 관리가 의무화된다. 고령 운수 종사자 비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졌다.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의 절반 가까이 65세 이상인 상황이다.

하지만 강화된 자격 검사에 우려도 나온다.

택시업계는 대부분 생계형인 만큼 사후 대책도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尹 탄핵 인용 후 조기대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 '장미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보면 파면 등에 따라 대통령이 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현재가 재관공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와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결정까지 2주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 이전에 치러야 한다.

현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도 4월 말은 정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기에 빠듯한 일정일 수 있다.

5월 초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연휴 때문에 선거일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5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의 경우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선거일을 모두 주중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의 투표 의사가 휴일의 영향을 덜 받도록 일요일의 중간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위에 의한 선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아 꼭 수요일로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5월 첫째 주의 경우 5일 월요일은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6일 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3~6일이 '황금연휴'다.

사전투표 일정과 투표 참여율을 높여주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하면 그 다음 주에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일 지정이 국무회의의 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전이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